

# 선박건조수리업 감사청구 취지

## 1) 개요

- 2024년 현재 조선업 중대재해는 온열질환 포함 사망 17명으로 조선업에 중대재해 발생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.
- 조선업은 고위험 업종으로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고,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기능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선업 수주 물량은 증가하고 있어, 이주노동 인력의 증가 등 조선업 및 선박건조 수리업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은 증가하고 있음.
- 특히, 선박 건조 수리업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임에도 수리업에 대한 신고, 위험 예방에 대해 노동부, 해양수산부, 경상남도 및 관련 지자체 등으로부터 선박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.
- 이에 2024. 4. 27. 거제시 사등면 소재 수리 조선소에서, 선박수리 작업 중이던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음.
- 민주노총은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해 전 조직이 대응하는 취지 속에서 선박건조 수리업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통해 각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.

## 2) 주요 청구 취지

- 선박수리는 조선업과 유사하여 폭발, 화재, 중독, 질식, 추락, 끼임, 협착, 화상, 맞음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임.
- 그러나, 고용노동부, 해양수산부, 경상남도 사이에 위험 정보에 대한 공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감독이 부재한 사이에 위험작업인 선박수리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고, 2024. 4. 27. 거제시 사등면 소재 수리 조선소에서, 선박수리 작업 중이던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였음.
-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과정에서 선박 수리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어야 하나,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.
-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리청은 선박수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작업계획서를 통하여 선박 수리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체적인 관리 감독은 별도로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선박수리 및 도급 내역을 통지조차 하지 않았음.
- 이처럼 고용노동부, 해양수산부, 지자체등 사이에 위험 정보에 대한 공유 및 관리 감독이 부재한 사이에 위험작업인 선박수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고, 중대재해는 위 각 정부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발생하였음.
- 이에 감사원은 선박건조수리 및 조선업 중대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 정부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등 위법, 부당 사항을 명확히 감사해야 함.